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961
----------	------

발의연월일 : 2024. 11. 27.

발 의 자 : 주진우 · 엄태영 · 우재준
곽규택 · 조배숙 · 박준태
유용원 · 서지영 · 윤한홍
박성훈 · 정성국 · 백종현
이성권 · 이현승 · 김도읍
신동욱 · 김미애 · 이인선
박수영 · 조은희 · 김희정
의원(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 및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당선무효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반환·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되, 대통령선거의 정당후보추천자 등의 경우에는 추천 정당이 이를 반환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정당 등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납부하도록 하며, 정당 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 국고 등에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1심 또는 제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도 그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추천 정당이 합당 등으로 없어져 해당 정당에게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되거나, 반환하여야 할 보전 받은 선거비용에 대한 징수를 면탈하거나 면탈할 목적으로 정당의 재산을 은닉·탈루하려는 시도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정당이 국고에 반환하여야 하는 보전 선거비용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심 또는 제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해당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압류를 위탁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하는 정당 등이 그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징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재산에 대하여 징수를 면탈하거나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는 등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제1심 또는 제2심 재판에서 추천 정당이 보전 받은 선거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하는 당선무효의 형이 선고된 후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추천 정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경우에는 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이 추천 정당이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의 반환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추천 정당이 분당되는 경우에는 신설하는 정당과 존속하는 정당이 연대하여 반환의무를 지도록 명시함

(안 제 259조의2, 제265조의2 및 제265조의3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9조의2(보전된 선거비용 등의 반환을 위한 징수 면탈 등의 죄) ①

제26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보전된 선거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하는 추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수를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65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압류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은닉·탈루하거나 손괴 또는 소비하였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정을 알고도 제1항과 제2항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제1항 본문 중 “제259조”를 “제259조, 제259조의2”로 한다.

제265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심 또는 제2심 재판에서 제1항 후단에 따라 추천 정당이 제57조와 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보전 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추천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관할세무서장에게 제4항에 따른 압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3장 제2절(제31조제4항제2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하여 압류한다. 이 경우 「정치자금법」 제27조의2에 따른 권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제26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5조의3(보전된 선거비용 등의 반환의무의 승계) ① 제1심 또는 제2심 재판에서 제26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추천 정당이 제57조와 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 후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추천 정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경우에는 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이 추천 정당이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의 반환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심 또는 제2심 재판에서 제26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추천 정당이 제57조와 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 후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추천 정당이 분당되는 경우에는 신설하는 정당과 존속하는 정당(추천 정당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연대하여 추천 정당이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의 반환의무를 진다.

제267조제2항 중 “第259條(選舉犯罪煽動罪)의 犯罪”를 “제259조 및 제259조의2의 범죄”로 한다.

제268조제1항 중 “이 法에 規定한 罪”를 “이 법에 규정한 죄(제259조의2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259조의2(보전된 선거비용 등의 반환을 위한 징수 면탈 등의 죄) ① 제26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보전된 선거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하는 추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수를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p> <p><u>② 제265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압류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은닉·탈루하거나 손괴 또는 소비하였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u></p> <p><u>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정을 알고도 제1항과 제2항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p>

니하다.

② (생략)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① ~ ③ (생략)

<신설>

<신설>

④ · ⑤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심 또는 제2심 재판에서 제1
항 후단에 따라 추천 정당이 제
57조와 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
·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
되기 전이라도 제1항에 따라 반
환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추천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관할세무서장에
게 제4항에 따른 압류를 위탁
하고, 「국세징수법」 제3장제2
절(제31조제4항제2호는 제외하
다)을 준용하여 압류한다. 이
경우 「정치자금법」 제27조의2
에 따른 권리 및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⑥ · ⑦ (현행 제4항 및 제5항

<신 설>

과 같음)

제265조의3(보전된 선거비용 등의 반환의무의 승계) ① 제1심 또는 제2심 재판에서 제26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추천 정당이 제57조와 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 후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추천 정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경우에는 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이 추천 정당이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의 반환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심 또는 제2심 재판에서 제26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추천 정당이 제57조와 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 후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추천 정당이 분당되는 경우에는 신설하는 정당과 존속하는 정당(추천 정당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연대하여

<p>第267條(起訴・判決에 관한 통지)</p> <p>① (생략)</p> <p>② 第230條(買收 및 利害誘導罪) 내지 第235條(放送・新聞 등의 不法利用을 위한 買收罪)・第237條(選舉의 自由妨害罪) 내지 第259條(選舉犯罪煽動罪)의 犯罪에 대한 確定判決을 행한 裁判長은 그 判決書謄本을 당해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에 송부하여야 한다.</p> <p>第268條(公訴時效) ① 이 법에 規定한 罪의 公訴時效는 당해 選舉日후 6개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完成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年으로 한다.</p> <p>②・③ (생략)</p>	<p><u>추천 정당이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의 반환의무를 진다.</u></p> <p>제267조(기소・판결에 관한 통지)</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제259조 및 제259조의2의 범죄----- ----- ----- -----.</p> <p>제268조(공소시효) ① 이 법에 規定한 죄(제259조의2에 規定된 죄는 제외한다)----- ----- ----- -----.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	--